

[기자회견문]

반복된 염전노예 악몽, 복지부동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014년 2월,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노예제가 현존하고 있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혹사 당하던 장애인이 서울의 어머니에게 ‘살려달라’며 편지를 보냈고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관을 파견하여 두 명의 장애인을 구출해 낸 것으로 일명 ‘염전노예’ 사건은 시작됐다.

일파 만파 번저간 사건의 파장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 없었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 없이 가해자 처벌도,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은 덮여졌다. 언제나 그랬듯 정치인들은 재발방지를 약속고 ‘인권침해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생색을 냈지만 매년 끊이지 않고 유사한 사건은 발생했으며, 7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또 한 명의 사람이 노예 취급을 당했다며 세상에 호소하고 있다.

과연 7년의 시간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건 당사자가 염전에 유입된 때가 바로 7년 전,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바로 그 2014년이였다. 피해자가 7년간 손에 쥔 돈은 금전이 필요해 사정사정해 받아낸 70만원이 전부였고 가해 염전주는 연말에 정산해 준다며 7년 동안 돈 한푼 주지 않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형식적으로는 임금을 이체하여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으로 다시 돈을 되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7년간 외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시자를 따라 붙여 승합차를 태워 두어번 육지로 내보내 준 것이 전부였고 사제 담배를 비싼 값에 불법으로 팔아 담배 값 때문에 남은 돈이 없다고 피해자를 우롱했다. 근로기준법은 무용지물이었으며 경찰도, 근로감독관도, 공무원도 7년간 복지부동, 달라진 것이라곤 더욱 교묘해진 염전주의 수법 뿐이었다.

우리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고발했지만 정작 우리가 7년간 싸워온 것은 복지부동한 시스템, 성의 없는 경찰, 무능한 근로감독관, 무책임한 공무원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고자 한다. 더 이상 염전노예를 용납하는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우리는 염전 지역 인권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시작된 전수조사는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터진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끝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등록장애인에 국한하는 등의 형식적인 실태조사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정기적인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더는 그동안 이뤄진 방식의 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 동안 이뤄진 실태조사는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방법만을 알려줄 뿐이었다. 의례히 이뤄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민간단체 참여하에 심층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우리는 관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모니터링과 사건 예방을 하지 못한 책임, 부실하게 조사하거나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소재를 밝혀내 엄중 징계하라. 돈 400만원에 피해자 조사도, 합의서도 없이 합의를 종용한 근로감독관을 즉각 해임하라.

네 번째,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피해자 지원의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피해자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자립할 때 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경찰청 중대본부수사과의 직접 수사를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역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 국가적 사안인 영전노예사건을 뿌리뽑지 못한 데 대해 전남경찰청장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우리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2014년 악랄한 가해자들이 줄 줄이 석방되고, 법원은 글씨도 읽을 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가 제출한 합의를 그대로 인정해 줬다. 영전주들은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 노예를 부려도 실형을 받지 않고 푼돈만 쥐어주면 사건이 종결되는데 누가 제대로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가해자 엄중 처벌없이 영전노예는 없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손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에 노예가 존재함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각성하라, 영전노예, 이제 끝내야 한다.

2021. 10. 28.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외 9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화우공익재단**